

李 대통령, 유엔서 ‘북핵 해법’ 제시… 트럼프와 접촉 주목

기조연설서 한반도 평화 해법 설명
‘중단→감축→폐기’ 접근법 제안
한미정상 별도 회담 일정 미확정

이재명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제81차 유엔(UN)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했다. 22일 취임 후 두 번째로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방안, 한반도 평화 해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대미(對美) 투자 협상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가 탑승한 공군1호기는 이날 오후 5시45분쯤 미국 뉴욕 존 F.케네디(JFK)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순방 이튿날인 22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총회에 참석해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했다. 이번에는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방안과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이 대통령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코리타운을 방문해 시민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은 ‘E·N·D 이니셔티브’ 구상을 밝힌 바 있는데, 이번에는 보다 발전·구체화한 방안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 앞서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수십년간 이어진 대북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는 대가로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의 북핵 해법을 제안했다.

NYT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재 상황

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하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핵무기 프로그램의 ‘폐기’가 아닌 ‘동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차피 실효성이 크지 않은 제재와 북한의 추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 개발 중단을 맞추려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면서 북한의 추가 핵무기 생산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

했다.

같은날 공개된 AP통신과의 서면인터뷰에서도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 “달리는 차의 방향을 바꾸려면 먼저 차를 세워야 한다”며 “중단·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법은 북핵 문제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일단 북핵 추가 생산을 ‘중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

된다.

한편 미국 순방 중 이 대통령은 주요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을 예정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도 별도로 접촉할 예정이다. 양 정상 간 만남 일정은 확정된 바 없지만 정상 리셉션을 비롯한 여러 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간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대미투자 협상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툭다운’ 방식의 담판 가능성을 기대하는 모양새다. 특히 대미 투자 협상은 막판에 최종 합의를 앞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또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는 이 대통령이 전투 병력 파병에 명확히 선을 그었기에, 조우가 성사되더라도 우리 정부가 밝힌 ‘군사적 기여 방안’은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NYT 인터뷰에서 “제3국 간에 이미 진행 중인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AP 인터뷰에선 “아테만에 배치된 해군 부대의 작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장동혁 “李 정권, 민주주의·법치 무너뜨려”

〈국민의힘 대표〉

국민 보고대회 열고 대통령 정조준
“공소 취소 아니라 재판 재개 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나가라, 내려오라”며 퇴진을 요구했다. 나아가 “공소 취소가 아니라 재판 재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재명 정부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집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기본 기둥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정권은) 검찰을 해체하고 사법부를 장악했다”며 “이제 하다 하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제청을 요청하고 나섰다. 사법부를 대통령의 발아래 두겠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의 2차 개각을 두고는 “인사가 만사인데 이재명 정부는 인사로 모든 일을 망치고 있다”며 “그 모든 뒤에 경기성남 라인과 김현지 부속실장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에서 열린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 “현지누나가 아니라 훈식이형만 쫓아냈다”며 “이제는 현지누나를 쫓아내야 한다. 경기성남 라인을 쫓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 대한 특검도 거듭 요구했다. 그는 “레버리지 ETF로 국민의 통장 54조원이 녹아내렸다”며 “레버리지 ETF 도입을 누가 결정했는지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레버리지 ETF 도입을 보고 받았다고 한다. 또 ‘누군가는 결정했겠죠’라고 답했다”며 “우리는 그 누군가가 이 대통령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만약) 아니라면 이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못 박았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가격 평탄화라고 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10%로 평탄화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박경수 기자 gws0325@

김민석, 민생·전작권·동물정책 ‘TF’ 시동

〈민주당 대표〉

TF·위원회 발족·출범식 연속 참석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 약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동물·전작권환수·격차 해소 등을 다루는 TF(태스크포스) 발족식에 모두 참여하며 민생·정책 추진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김 대표는 이날 동물과더불어TF(태스크포스), 전작권환수추진단, AI시대 품격 사회·격차해소 민생안정 추진위원회(품격민생위)의 출범식과 발족식에 참석해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동물과더불어TF는 국회부의장인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단장을 맡았고, 전작권환수추진단은 4성 장관 출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단장을 맡았다. 품격민생위는 김 대표 본인이 위원장을 맡고, 국회의장을 지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상임고문을 맡았다.

김 대표는 민생안정추진위 발족식 인사말에서 “메가12라는 우리의 구조와 방향을 제시하는 TF가 있고, 나머지는 비교적 단기 속전속결형 미니TF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의 정점이자, 지향이자, 본령이 오늘 출범하는 이 품격민생위원회”라고 강조했다.

품격민생위엔 김남근 의원이 간사를 맡으며, 위원회 산하에 중소기업 경영안정, 채무부담 안정, 청년고용·주거 안정, 법·제도 개선, 소상공인 민생안정 등 조직을 두고 민생 현안 정책과 입법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전작권환수추진단 발족식에선 전작권환수가 실질적으로 검토 가능한 때에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작권을 대한민국이 스스로 행사하는 것이 대북 억제력의 측면에서 안보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며 “한미 양국 협력 하에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적절하고도 잘 준비된 시기에 환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물과더불어TF 출범식 인사말에선 ‘반려동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출발점을 적절하게 규제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의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동물과 더불어TF가 어떤 주제를 어떤 순서로 다루야 하는가가 제일 고민이 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조희대, 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

靑 “헌법 위배… 깊은 유감”

청와대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대통령과의 권력다툼”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고 노태와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노태와 전 대법관이 퇴임(2026년 3월 3일)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40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에서도 격양된 반응이 나왔다. 김민

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인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통령과 권력다툼을 하는 것인지,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참으로 황당할 따름”이라며 “여전히 남아 있는 반(反)민주적·반헌법적·내란적 사고”라고 꼬집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사위원들도 성명문을 통해 “윤석열의 12·3 쿠데타에 이은 사법쿠데타”라면서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을 정면으로 부정함과 동시에 대법원장의 정치행위이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성토했다.

/서예진 기자

李, 이형일·강신철·홍지선 임명안 재가

국회서 이소영 청문보고서 채택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또 이날 국회에선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결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이소영 후보자 임명안까지 재가되면 이재명 정부 2기 내 각 지명자 6명 중 4명이 임명된다.

유엔(UN)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21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 이 대통령

은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세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국토교통위는 여야 합의로 이형일 후보자와 홍지선 후보자 인사청문결과보고서를 각각 채택했고, 국방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강신철 후보자 인사청문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도 전체회의를 열고 이소영 중기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이견 없이 의결했다.

/서예진 기자